

추미에 “국민의당 증거조작, 복풍 버금가”

“진실 확신했다면 나섰을 것”
“조작 용인 미필적 고의 보여”
“제보자 신원은 확인 했어야”



4당 교섭단체 원내대표와 오찬 회동. 정세균 국회의장(가운데)과 4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지난 7일 오후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오찬 회동을 하기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당 김동철·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정 의장, 자유한국당 정우택·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

추미에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소위 '머리 자르기 발언'과 관련해 국민의당이 자신의 시비를 요구하며 국회 일정 비협조 방침을 밝힌 데 대해 “국민의당 증거조작 게이트는 일찍이 복풍 조작에 버금가는 네거티브”라고 강하게 맞받았다.

추 대표는 이날 오전 충남 천안축구센터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한 뒤 “네거티브 조작의 속성과 특징은 관련자가 직접 나서지 않고 방패막이를 먼저 세운다는 것”이라며 “조작이 아닌 진실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면 직접 나섰을 것”이라고 말해, 사실상 인철수 전 국민의당 대선후보를 포함한 지도부를 재계명했다.

그는 “그러나 조작된 것이기 때문에 직접 나서지 않고, 설령 조작된 것이라고 해도 이것이 공중에 유포될 경우에는 상대방에 치명적인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을 용인하고 국민의당 시스템이 전격적으로 풀가동돼 유포시켰다”며 “그런 것이 바로 네거티브 조작의 특징”이라고 주장했다.

추 대표는 “그것은 그런 사실과 결과의 후폭풍을 용인한다는 것은 형사법상 미필적 고의에 해당한다고 보인다”며 “더군다나 죄를 죄로서 덮으려고 했던 것만 봐도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규정했다.

이어 “박지원 전 선대위원장은 죄를 죄로 덮기 위해서 자신의 명의로 상대당 대표인 저를 직접 나서서 고발까지 했다”며 “민약 이런 전반적인 과정에서 진실에 대한 확신을 가지려면 적어도 제보자에 대한 신원 확인은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추 대표는 그러면서 “파슨스 스몰의 국내 동기가 소수에 불과한데 몇 명이며, 또 신원을 쉽게,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한 뒤 “이런 전 과정을 보며

라도 미필적 고의에 의한 형사 책임은 반드시 수사가 돼야하고 책임을 져야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한편 추 대표는 이날 최고위에 앞서 당원들의 ‘셀카 촬영’ 요청에 응하는 등 국민의당의 공세에도 상대적 여유 있는 태도를 보였다.

박병계 최고위원은 “당은 당의 길이 있고, 국회는 국회의 길이 있다”며 “당은 국회를 대변하는 게 아니고 당원과 아직 당원화되지 않은, 그러나 당을 지지하는 국민을 대변한다”고 강조했다.

박 최고위원은 “이 사건은 누가 얼마만큼 관여했는지 그건 수사로서 밝혀야겠지만 이유미씨가 관여한 것은 자유 질서를 침해한 게 분명하다”며 “그런 측면에서 형사적 책임의 소지를 떠나 국민의당이 공당으로서 과연 정치적 책임을 충실하게 하고 있나 질문을 드린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그러면서 “당의 대표로서 엄중하게 사태에 대한 평가를 내리고 당원에게 호소하고 상대방에게 정치적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온당한 태도라고 생각한다”고 응

호했다.

이날 추 대표의 발언과 관련, 박원주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준비된 원고 없이 직접 대표가 메모해 가지고 온 내용을 말했다”고 설명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머리 자르기’는 은유적 표현이었다. 당시자는 기분 나쁠 수 있지만 어쨌든 책임자들이 밝혀야 되는 것 아니냐는 부분에 대해서 (말한 것)’이라면서도 “국민의당에서 무한정 국회 일정을 안 하겠다고 한 것은 또 다른 방법으로 풀어나가야 할 것이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퇴와 사과하는 문제를 격하게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수석대변인은 추가경정예산안(추경)과 정부조직법 처리 등을 앞두고 추 대표의 발언으로 인해 국회가 ‘완전 정지’된 것에 대해서는 “정치는 타이밍인데, 어쨌든 우리가 여소야대라서 누군가 설득해서 과반을 해야 한다. 그 1차 파트너가 국민의당”이라며 “그러나 국민의당이 그런 엄청난 내용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

이라고 발언 시점의 ‘아쉬움’은 표현했다.

박 원내수석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추경 문제나 정부조직법, 인사청문회 등이 우리가 명백하게 여소야대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으니 누군가 하고는 협치를 통해서 추경·인사청문회도 해야 한다”며 “원내에서는 교섭하고 협치를 실질적 절차 밟아서 진행할 문제라고 보고 있다. 대표도 이런 상황을 모르는 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국민의당의 ‘문준용씨 제보조작’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조사를 지켜볼 것이다. 국민의당은 자체 진상조사를 했다고 했는데, 그것을 발표했고 그게 얼마만큼 팩트인가에 대해서 검찰 수사를 지켜보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추 대표의 ‘미필적 고의’ 언급이 검찰 수사의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최소한 이 부분에 대한 책임감 있게 국민의당 지도부에서도 그에 따른 상응한 행동을 하라는 것이다. 검찰에 ‘미필적 고의’가 데려다 수사하세요’ 이게 되겠다”고 반문했다. /뉴시스

국회, 이효성 방통위원장 인사청문요청안 접수

방통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로 내정된 이효성 성균관대 명예교수(사진)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서가 7일 국회에 접수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인사청문 요청서류에서 “후보자는 그동안 방송의 공정성, 공공성, 독립성, 다양성을 위한 방송개혁 논의를 주도해온 대표적인 언론학자이자 언론방송계 원로”라며 “방송위의 중요한 설치목적 중 하나인 방송의 자유와 공정성, 공익성 제고의 의미와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강화하고 국민 중심의 미디어 복지를 구현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여러 가지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본인과 가족의 재산으로 22억7,600만원을 신고했다. 주요 내역은 본인 명인인 서울시 강서구 아파트(4억5,400만원), 예금(3억5,600만원) 등 총 8억1,350만원을 신고했다. 배우자는 강남구 아파트(8억5,600만원), 예금(5억3,100만원), 2015년식 미니 쿠파 차량(1,940만원) 등 총 13억6,730만원을 신고했다. 후보자의 모친과 장녀는 각각 예금 350만원과 9,280만원을 신고했다.

이 후보자는 1975년 8월 육군으로 입대해 가사사령의 이유로 6개월만인 1976년 2월 이병으로 전역했다.

한편 지난 3일 방통위원장에 내정된 이효성 성균관대 교수는 전북 익산 출신으로 서울대 언론학 석사와 미국 노스웨스턴대 언론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뉴시스

한·미·일 “北 더 강력한 안보리 제재결의” 공감

한·미·일 3국 정상들은 6일(현지시간) 북핵 문제 해결방안에 대해 더 강력한 유엔 안보리 제재결의안을 신속하게 도출해, 이전보다 훨씬 강화된 압박을 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날 오후 함부르크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힌 뒤 “한·미·일간에 굳건한 공조를 바탕으로 중국과 러시아 등 관련국 등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강 장관은 “3국 정상들은 북핵문제 진전을 위한 중국측의 적극적 역할에 주목하고 한중정상회담을 포함해 이번 G20을 계기로 개최되는 양자회담 및 다자회의를 최대한 활용하여 중국, 러시아와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미일 정상은 북한이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라고 주장하는 데서 보듯, 가파르게 진행되는 북한의 핵탄두 미사일의 능력이 고도화 되는 것을 시급히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덧붙였다.

강 장관은 “3국 정상은 오늘 만찬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 차원에서 그간 진행해 온 협력을 평가하고 앞으로 3국간 협력을 지속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미국 쪽에서 거론되고 있는 군사적 옵션 관련 언급 여부에 대해 “군사적 옵션 얘기는 안 나왔지만, 탈러스 장관은 ‘peaceful pressure campaign’이라는 개념을 언급했다”며 “평화적인 방법을 추구해야 군사적 옵션을 선택하는 방향으로 흐르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공감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중국의 역할을 이끌어내기 위한 방법에 대해 “미국이 중국에 대한 금융제재 등 세컨더리 보이콧을 하는 방향으로 계속 노력하고 있다”며 “일단은 안보리 내에서 더 강력한 제재결의를 추진하자는 데 한미일이 뜻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처럼 몇 주 걸리던 게 아니고 빠른시일 내에 결의를 추진하겠다는 것이 이번 회동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덧붙였다. /뉴시스

김중회 의원, “농정 기본방향은 농업보호정책”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예방을 받은 김중회 국회의원(국민의당, 김제부안)은 7일 “우리 농정의 기본방향은 농업 보호에 있다는 점을 장관께서 깊이 인식하고, 대통령께서도 농업보호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을 가지시도록 끊임없이 조언을 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농민실정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으며 국회의원으로서도 농정에 대한 시려깊은 의정활동을 해주신 분께서 장관으로

취임하시게 되어 미래농업이 매우 희망적이라고 언급한 김 의원은 “장관께서 지금보다도 더 많이 농민과 소통해야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언급하며, “늘 공무원으로서 관료주의에 이미 길들여져 있는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는 좋지만 농업보호와 농정혁신을 외면하는 관료사회에 대해서는 따끔한 질책도 필요할 것인데 이 부분을 장관께서 특별히 신경써 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 농업은 신자유주의에 물든 경쟁과 효율성만을 강조해서는 달성할 수 없는 공적기능이 아주 때문에 국가가 나서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할 기간산업이라는 김 의원은 “새만금내륙어로행위에 대한 어민의 피해가 심각하다”면서, “국가를 믿고 새만금사업에 전적으로 동의한 어민의 생존권이 달린 어로행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서둘러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김영록 농식품부장관 예방 자리에서 “장관 더 많이 농민과 소통해야”

이에 대해 김영록 장관은 “새만금내륙 한적어로행위를 요구하는 어민의 뜻을 잘 알고 있다”면서, “이는 궁극적으로 면세유의 공급에 있는데, 관계부처 간 구성된 협의체를 잘 활용하여 어민들의 생계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대책마련과 가려선착장 확장에도 최선을 다해서 조기완공토록 하여 어민들이 마음 놓고 어로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회답했다. /김진성 기자

14살 소녀들

어느 때와 같이 세 소녀는 집으로 가던 길이었습다.

건너편 횡단보도에 쓰러져 있는 할머니 한 분.

할머니의 상태가 위급하다는 것을 알고, 어딘가에서 휠체어를 빌려와 가까운 병원으로 모셨습다.

그리고 할머니의 가족이 올 때까지 모두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다.

14살 소녀들의 기지와 사랑의 실천. 따뜻한 학생들이 있어 오늘도 전북교육은 웃을 수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잊지 않습니다

가난은 학교고 행복은 교육

지난 4월 전주 우림중 1학년 여학생 세 명(최수빈, 배은수, 박민지)은 호주동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본부 근처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쓰러진 70대 할머니를 발견했습니다. 곧장 가까운 정형외과로 달려가 휠체어를 빌려다 할머니를 병원으로 모시고 갔고, 할머니의 가족들이 올 때까지 병실에서 곁을 지켰습니다. 이 따뜻한 선행은 5월 25일, 할머니께서 학생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기 위해 학교를 찾으면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www.jbe.go.kr
전라북도교육청
JEOLLABUKDO OFFICE OF EDUCATION